

기아차 조장·생산관리자협 파업자제 호소

“명분 없는 ‘정치파업’ 이젠 그만하자”

“고용안정 우선...” 현장 공감대 확산 16년 연속 파업 고리 끊길지 촉각

기아차 노조에서 파업자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고객과 여론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파업을 강행해선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조합원들의 파업 자제 촉구는 적자폭 확대, 해외공장 증설 등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명분 없는 ‘정치파업’보다는 ‘고용안정’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합원들의 파업 자제 촉구는 적자폭 확대, 해외공장 증설 등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명분 없는 ‘정치파업’보다는 ‘고용안정’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아차 3개 공장의 입사 10~15년차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협의회와 15년차 이상의 조합원들이 주축을 이룬 생산관리자협의회는 수개월 전부터 ‘암울한 기아차의 현실’과 노조 수뇌부와 괴리된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의 파업 자제 촉구는 적자폭 확대, 해외공장 증설 등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명분 없는 ‘정치파업’보다는 ‘고용안정’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식지를 통한 파업자제 호소는 이같은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16년 연속파업 멈추나=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불릴 만한 이들 협의회의 노력이 오는 28, 29일 부분파업까지 멈추게 할지는 의문이다.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을 하지 말고 자고 일부 조합원들을 접촉하고 있으나, 찬반투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심해 바라는 바의 결실을 얻을지 불분명하다”면서 “그러나 협의회 회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도 암묵적으로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분파업을 철회한 현대차 노조가 ‘전체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데다, 삼급단체인 금속노조가 26일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을 감행하기로 한 흐름도 기아차 파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 현재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조합원들이 ‘전체파업’까지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파업 돌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현대

차 노조 조합원은 “노조집행부가 이번 파업의 부분철회를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에 국민들이 진저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파업은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정치파업인 만큼 부분 철회가 아닌 전체파업까지 철회해야 국민적인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6일 광주지역 경제단체와 광주공장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각계의 파업철회 압박이 빗발칠 것으로 보여 파업 돌입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25일 서울 영등포로터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금속노조의 한미 FTA 반대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F1 특별법 6월 국회 통과 초비상

위원장 자리 다툼...25일에도 심사위 공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F1 특별법(포플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을 심의할 법안심사소위가 공전,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에 비상이 켜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등은 각각 논평을 내고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심사소위 참여를 촉구, F1 특별법은 6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원내 1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과 현 체제대로 일단 진행하자는 범여권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F1 특별법은 양당 간사의 합의 여부에 따라 법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일정상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당일 문광위 전체회의에 넘겨져 통과된다 하더라도 계류 기간 5일과 법사위 심의 등을 감안하면 6월 국회가 폐회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즉, 26일이나 27일 F1 특별법이 문광위

를 통과한다고 해도 계류 기간을 이를 정도로 줄이고 법사위에서도 1~2일 내에 신속하게 심의해야 한다.

이처럼 F1 특별법이 절차상의 문제로 진통을 겪자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등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법안심사소위 참여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면서 F1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 문제는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F1 특별법은 전남의 현안사업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법안심사소위에 즉각 참여, 6월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호남지역 발전에 기폭제가 될 주요 법안 심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입에 발린 소리로 호남지역 발전을 떠들 것이 아니라 F1 특별법의 6월 국회 통과를 위해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영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F1 특별법에 대한 당 지도부의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안심사소위 불참보다는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에 소극적인 범여권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교육부 ‘내신정책’ 발표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학생부 반영 방법과 관련해 25일 “원칙은 고수하되 예외적인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서 타협의 여지를 만드는 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입시요강을 앞당겨 발표할 것을 못박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사립대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허황된 얘기라서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등 대화마저 거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시한까지 입시요강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명목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한 내신 선정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교육부와 대학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극도의

대학들 “자율권 더 침해” ‘내신 갈등’ 후폭풍 조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교육부-일부 사립대 극한 대립이나=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지만 발표 직후 일부 사립대들이 크게 반발했다.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교육부에서 입학전형을 아예 다 짜줬으면 좋겠다”, “오하러 자율권 침해가 더 심해졌다”, “허황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차적으로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며 올해 내신반영비율에 대해 이전보다 한층 완화된 입장을 밝히면서도 몇가지 단서를 달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우선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20일까지 확정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각 대학이 정시모집 직전인 10~11월이 돼야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했고 교육부도 이를 용인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훨씬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대학들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학생부 선정방식의 구체적 기준까지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은 8월 말까지 입시요강을 확정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모집요강 발표시기를 지연시키는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다시한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내신반영비율 선정방식 ‘변경’ 논란= 교육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단서’는 학생부 반영비율 선정방식을 정부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산출할 때 학생부, 수능, 논술 등 여러 전형요소 가운데 학생부의 기본점수만 활용해 반영비율을 계산했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들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학생부 선정방식의 구체적 기준까지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이양추진위 활성화 급하다”

국회서 지방분권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김무성, 김경권, 유기준 의원의 공동 주최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후원으로 25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성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두 기구가 병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제의 특성상 대통령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비중을 둘 때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상 사무의 구분 및 배분의 원칙을 보완해야 하며 정부의 지방자치법령 제개

정시 사전 심의제 도입, 위원 위촉방식의 개선 및 사무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향 건국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시작은 참대하였으나 끝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기존 지방이양시스템의 개선과 지방연구원의 발전 및 활성화를 통해 다음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방 출연 지방재 연구원을 신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이양의 형태는 ‘일괄법’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소요 재원도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gistar hearing aids. Features a rabbit wearing a hearing aid and a person with a hearing aid. Text includes '세계적 권위인증 품질 보증!', '세계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계기보청기', 'www.segistar.co.kr', and '대리점 사업본부 02)538-9388'. Includes a list of regional branches at the bottom.